

여야 “대출이자 부담 경감...민생·개혁법안 4월 우선처리”

국회법·형법·선거법등 4월중 처리

주호영-박홍근 교섭 체제 마무리 김 의장 “전원위, 꼭 결실 맺으면”

여야는 4일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민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절차에 들어간 선거제도 개편의 4월 내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원내대회를 마치고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노력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이달 중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 또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민법 개정안에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를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주호영-박홍근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회동이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뽑고, 민주당도 내달 초 선거를 한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원내대표는 따뜻한 도자기처럼 상대를 감싸는 포용의 마술사를 보여줬고, 박 원내대표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할 때 양보할 줄 안다”며 “예산안 합의처리, 이태원 참사 처리(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원회는 두 분 없으면 안 됐을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원내대표를 떠나시더라도 정치는 계속 하시니까, 전원위를 통해 꼭 결실이 맺어졌으면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고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물을 국민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깊이 감사드리고 후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한 양쪽검법, 간호법, 의료법 문제나 양곡관리법까지도 여야가 협의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많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세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가장 편하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였다”고 끝인사를 했다. 최이슬기자

尹, 양곡법 재의요구안 원안 의결...정부 ‘1호 거부권’ 행사

대변인 “대통령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실용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되었으나,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양곡거부권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다. 대통령실 또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쳐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까지 총 66회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지난 2016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사정문화법’으로 불렸던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7년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김재환기자

송갑석 국회의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등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활동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정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대상자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내실 있는 종합보고서 작성이 필수불가결 사항”이라며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일로부터 6개월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에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